

##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City Space and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treet Vendors' Movement in 1980s

김준희\*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인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 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에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도시 빈민, 노점상, 노점상운동, 노점상 정책, 도시에 대한 권리

### 1. 서론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인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노점상의 역사는 길게는 조선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pumpkin21s@hanmail.net)

시대 난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수가 증가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공업주도형 경제성장책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발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면 노점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노점상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점 감소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여 그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sup> 이는 외환위기로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강이동이 증가해서 빈곤층의 외연이 크게 확장하게 되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부문에 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도 뚜렷한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마저 불투명하자 비교적 입직이 쉬운 비공식부문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노점상 수의 증가와 함께 노점상 내부의 구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학력, 저연령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러한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지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도시공간에서의 노점상 단속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 된 것은 ASTA총회, IOC국제회의, 86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가 개최되었던 1980년대부터이다. 국제행사에 따른 도로정비로 노점상행위는 금지되었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 
- 1) 서울시에서 1998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의 수가 IMF 이전인 1997년에는 대략 1만 여개 정도였으나 1998년 13,551개로 늘어났으며 경기 회복 때까지 노점상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서울시 발표 이후 더욱 급증해 매년 20~35%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 2) 연령과 학력 면에서 외환위기 전에 노점상을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이후에 노점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연령은 30·4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학력 면에서는 고졸이상이 약 60%를 차지하여 IMF 관리체제 전에 노점을 시작한 사람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철거되었다. 1980년대 이후 2008년 서울디자인올림픽까지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 노점 정비는 필수적이었으며, 이 외에 각종 개발사업 및 지자체의 도로정비사업, 노점감축 선거공약 등으로 노점상은 항시적인 단속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서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집단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아니고 노점상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노점상의 모든 권리는 국제적인 행사, 각종 개발사업, 시민의 보행권 등 어느 곳에서도 우선시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노점상조직이 도시 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노점상조직은 1986년 ‘노점상복지협의회’로 발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점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 교육, 간담회, 단합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마차의 규격화, 위생사업 등을 정비하는 자율질서 사업을 전개한다. 외부적으로는 진보정당, 빈민운동단위 등과 기자회견을 포함한 입장 발표 및 여론화 작업, 서울시와 각 자치구를 압박하는 집회 및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노점상조직은 노점상운동을 통해 노점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대중운동, 빈민운동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시작은 1980년대의 민주화항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중심인 중구, 동대문 등을 일대로 형성된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1970년대의 도시빈민 연구에서는 노점상이 경제성장과 함께 소멸될 집단으로 보았으나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분석하기 위해 비공식부문론을 사용하

였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도시빈민을 어느 계급에 위치 지을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상황이 변하면서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노점상에 관한 연구는 행정적 차원에서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정책 제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노점상에 대한 1980년대의 논의들(신경희, 1984; 안원실, 1984; 한우섭, 1985, 박종일, 1986; 강정원, 1989; 장재준, 1989)은 주로 도시영세민(저소득층), 이농빈곤층 또는 무허가정착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곤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한 것이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배수미, 1990; 정원오, 1990; 박대영, 1999; 홍인옥, 1999)로는 행정당국이나 점포상인, 일반시민과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거나 노점상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게 되었다. 또한 IMF 이후 노점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와 단속의 어려움을 겪으며 노점상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김준연, 2000; 조대현, 1999)가 있으며 황학동시장의 노점상 연구를 통해 시장의 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진선희, 2004; 안주영, 2006)가 있다.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연구는 McGee(1977)가 동남아시아 6

개 도시의 노점상을 연구한 이래로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이는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 노점상에 관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노점상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3세계의 도시 비공식부문이 선진국의 슬럼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도시 경제에서 고용 기회와 소득기회를 마련해주는 역동적 부문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안주영, 2006: 4).

그 외에 서울의 노점상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한 실태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행한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여 자료 분석이 현상 기술에 치중하였으며 노점상의 재생산구조와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술을 통하여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과 노점상의 조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이 도시공간에서의 노점상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노점상에 관한 예비적 고찰

### (1) 도시공간과 노점상

노점활동은 공공장소인 ‘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지칭한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사람과 활동의 소통과 흐름을 위한 공공공간이다. 그러나 신개발주의하의 공공공간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있어서 주요한 장소마케팅의 대상이자 이윤을 창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2002년 청계천개발, 2008년 동대문디자인파크 앤 플라자 건설 및 디자인거리 조성 등은 정부와 지자체의 신개발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점상은 이러한 공공공간을 일정하게 점유하는 형태로 장사를 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 노점상이 입지하는 가로는 잠재고객이 많이 오가는 교통관련 시설 부근, 상품구매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장 내 혹은 시장 주변의 길, 특정 잠재고객이 집결하는 장소나 길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로 인한 단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공식 부문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비공식부문으로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노점상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즉, 도시공간의 점유를 통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과 이윤창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 정책과 충돌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 (2) 노점상 정책의 변화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인식은 교통흐름의 장애, 보건위생 저해, 도시미관 저해, 상행위 질서 문란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주로 규제적 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정부는 노점상을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존재로서만 파악하여 이를 규제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제반문제의 형상적 원인이 노점상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노점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므로 노점상 정책은 노점상의 영세성을 감안한 보호적 측면은 무시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은 채 단속 등 규제 일변도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제도상으로 노점상 행위는 교통흐름의 장애와 도로 무단점유의 관점에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관점에서는 식품위생법, 오물을 노상에 방치하는 관점에서는 오물청소법의 저축을 받으며 이 외에도 시장법, 소비자 보호

법, 고물영업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의 상행위 자체에 대한 특별한 법령 등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점상에 관련된 제도는 그 사용주체 및 위법사항, 위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노점상의 단속규제는 제한적, 일시적, 선택적, 국지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법규 적용의 일관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원칙보다는 정부의 편의나 정책입안자의 즉흥적 발상에 의해서 혹은 외국인에 대한 체면 치레를 위하여 집행되어 단속에 대한 노점상들의 반발을 심화시키는 한편 일반 시민의 비난과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이따금씩 구체적이지 못한 노점상 양성화나 선별적 허용 등의 정책안이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도적 장치가 없는 허구적인 지원보호 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이었다. 즉, 노점상 정책의 기초가 단속 등의 규제정책이었으며 그 집행이 철저하지 못한 채 일시적 혹은 국지적 필요에 의한 단속이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다(김준연, 2000: 42). 이러한 정책적 관행은 적어도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점상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부각한 시기는 1980년대였다. 그 이전의 노점상은 근대적 유통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거의 단속되지 않았다. 간혹 단속을 하는 경우는 상인들 간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국제행사 등 일시적 혹은 국지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정해지면서 도시미관 정비와 관련 노점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점상 절대 및 상대금지구역이 지정되어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나마 자율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IMF충격,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차별적인 단속을 했다. 하지만 철거된 노점상들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올림픽 이후 노점상 단속이 다소 완화되는 듯했으나, 1989년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의 노점상 철거요구 시위를 계기로 노점상에 대한 대규모 일제정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1992년 석촌호수 포장마차 사건을 유발하는 등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노점상이 더 이상 노동능력이 없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대안적 생계수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sup>3)</sup>의 분류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아직까지 노점상에 대한 관점은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점상 대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강력단속에 대해 노점상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완화했으며, 대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지역이나 절대금지구역<sup>1)</sup>을 중심으로 지도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노점상에 대해 대체로 제한적 허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2007년 서울시에서 노점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부분 관리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점관리특별대책의 내용은 ‘노점금지구역’과 ‘노점유도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 자치구별 1개 지역을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거리’ 선정 계획, 시간제 규정(오후 4시 이후) 및 규격화 규정(손수레 2m×1.5m),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3m 구간, 횡단보도 및 택시 승차대로 부터 3m 구간, 버스정류장구역 전후방 3m

3) 정부와 지자체는 노점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어 노점을 생계 수단으로 가진 것이고 기업형은 2개 이상의 노점, 대형 노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노점을 지칭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생계형과 기업형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노점 당사자들의 입장과 참여하게 대립된다.



구간을 노점금지구역 설정 지속적 정비, 3m×2.5m 이상의 포장마차, 2m×1.5m 이상 리어카 등을 기업형 노점으로 규정 지속적인 정비, 이 외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 기업형 노점 강력 단속 입장 표명, 2009년 서울시 노점조례 제정으로 노점의 체계적 관리가 포함된다. 이는 표면적으로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영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에 방해되는 노점상을 이면도로로 이전시키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또한 조례를 통한 노점상 관리의 목적은 노점상 수의 점진적 축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관리대책에 노점상 조직은 반대하고 있다.

### 3. 노점상 운동의 형성 과정<sup>4)</sup>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운동이 형성되는 사회적 배경과 초기 활동을 1980년대 초반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사회에서 노점상이 증가한 시기와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노점 단속 형태를 살펴봄에 이에 따른 노점상의 초기 저항형태와 조직의 결성 과정 및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겠다. 노점상 조직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와 구체적인 분석이 담긴 문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장의 내용은 전국노점상총연합의 전 활동가의 구술<sup>5)</sup>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4) 본 장의 내용은 김준희(2010)의 연구를 발췌 및 요약하였다.

5) 2006년 12월 8일. 도시빈민운동사 공개세미나에서 ‘노점상운동의 태동과 역사’에 관해 강연한 내용이다.

## 1) 노점상의 증가와 집단행동

### (1) 노점상의 증가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공업주도형 경제성장책은 급격한 도시화를 유발시켰다. 정부의 경제성장책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도시의 집적이익을 추구하여 도시에 공업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로의 이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도시부문으로 유입된 농촌인구는 도시의 고용 흡수 능력을 훨씬 능가하여 도시를 과도하게 팽창시켰고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공업화는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고용효과를 창출해내지 못함으로써 도시 고용구조 및 취업구조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중 특히 저기술, 저자본, 저학력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수많은 도시유입 노동력이 상당 기간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취업하더라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조적 산물로서의 노점상은 우리나라 산업화가 파생시킨 불균형과 모순의 한 단편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 뭐 노점상 다 아시겠지만 70, 80년대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노점상들이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70, 80년대 급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노점상들이 급증을 하다가 보니까 단속이 더 심해지죠, 굉장하. ...중략... 제가 1980년도에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1980년도에 딱. 그 계엄령 때라고 생각하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략... 공장에 다니다가 이제 손을 다쳐가지고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프레스공이였어요. 쉬는 기간 동안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뭐 쉬면은 아주 임금이 조금 뿐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면서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친구가 노점상을 하길래 이렇게 나와서 '며칠 거들다가 다시 직장에 나가

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그냥 노점상으로 굳혀진 사례입니다.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공업에서와 달리 일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는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과정의 자동화·합리화 추세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따라서 사양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대적 산업부문에 적응하기 어려운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저학력의 장년층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도시의 주변적인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갔다. 이에 더해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해 갔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사후 보상대책이 빈약한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을 거치거나 아니면 곧장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장사도 나도 좀 하면 되겠구나.’ 해서 첫날 딱 깔았는데. 그때 당시에 방법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공익보다는 위상이 좀 틀리고 파출소에 그냥 민간인이 고용이 돼서 옛날에 경력이 이제 무슨 군대라던가 해병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용을 해서 경찰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을 방법이라고 했어요. 순찰, 야간 통금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간판정리도 하고. 그때는 구청보다는 경찰 쪽에서 단속을 많이 했으니까. 단속을 같이했는데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한 8 대 2 정도로. 그런 시기였으니까. 방법들이 나와서 첫 날 하는데 단속이 들어와서 즉결을 살은 기억이 나요. ...중략... 그렇듯이 단속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 조직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조직 할라고 생각도 없었던 거고 조짐도 안보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즉결을 끌려가고 단속을 받고 이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

니까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비민주성으로 특징 지워진 군부 강압체제의 구조를 띠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이후 각종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삼청교육대와 보호감호 시설의 도입, 고문과 감시에 의한 처벌, 우편 검열과 도청이 실시되는 등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법」과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써 정권에 반대하는 각종 저항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시위, 농성 등 각종 투쟁에 대해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사전 봉쇄하거나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국민을 감시하고 연행·조사하는데 있어서 안기부뿐만 아니라 군부대 내의 사찰업무를 관장하는 국군보안사령부까지도 동원되었다. 이러한 공안 기구에 의해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하루에 평균 1.6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으며, 1981~1983년 동안 1천 4백여 명의 학생이 제적되었다(하형주, 2007: 99).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노점상도 사회 기강을 저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노점상에게 폭력적인 물리적 단속을 행사하며 즉결심판을 통하여 벌금과 구류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뜯기기도 많이 뜯겼어요. 안정되게 좀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나 구청, 파출소 그런데다가 돈을 상납을 하거나 아주 고정적으로 그것도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했고 이쭈마들은 뭐 심지어 몸까지 유린당하는 상황이. 자리를 보장받고. ...중략...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으로 이제 단속을 받고 쫓겨 다니고 2, 3일에 한번 씩 즉결 가고. ...중략... 이루 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암튼 손수레도 많이 뺏기고 맞기도 많이 맞고 싸우다가. 우리가 또 서울 출신이고 또 나도 건달기가 있어가지고 건들건들하다 보니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개별적으로 방법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구류도 한 일주

일씩 살고 그렇게 하면서 버틴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아주 모진 단속을 받고 돈도 뜯기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죠.

지자체별로 단속을 실시하는 현재와 달리 1980년대는 정부의 노점 정책에 따라 경찰의 주도하에 단속이 이루어졌다. 경찰에서 고용한 방법대원이 단속을 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벌금을 부과하였고 노점상들의 구류는 일상적이었다. 노점상이 공공용지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상행위는 ‘불법’이었고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단속주체에게 단지 ‘잘 보이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장사할 수 있었다. 또한 노점상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反)인권적 폭력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었고 안정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 주체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까지 노점상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저항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았다.

## (2) 노점상의 집단행동

정부는 1980년대의 경제성장 정책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 이미지 부여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힘썼다. 198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ASTA 총회, IPU총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선진국 도시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는 도시 미관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이유로 주요 간선 도로의 노점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는데, 1983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에서 단속된 노점상은 모두 3,282명이었다. 이 중 252개의 마차가 수거되고 33명이 고발당했으며 222명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또한 리어카 포장마차의 경우 총 352대를 단속하였고 그 중 200여 대가 단속 차량에 의해 수거되어 162대가 현장에서 폐기되었

다(해방수레를 끌며, 1996: 18).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 지자 노점상의 불만이 고조되어,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첫 집단행동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길거리에 놓고 가는 데가 많지만 손수레를 반드시 보관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이. 노점상 손수레를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보관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흔하지 않아요. 그런 보관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하죠. ...중략... 그런 데서 이제 얘기들을 쭉 하면서 단속이 좀 심하다. ‘시청에 가서 한번 개겨보자.’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장사를 못하니까. 돈은 뜯기는 대로 뜯기고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즉결. 처벌받을 건 다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 몰려가서 뭐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짜에 모여서 간 게 이제 저도 갔어요. 그 때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 인제 술 먹고 조직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다 옆으로 흩어져 있다가 꽤 많이 왔어요. 아무튼. 몇 명이라고 기억이 안 되는데. 꽤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명동에서만 그때 당시에 한 2,300명이 갔으니까. 꽤 많이 간 거죠. 명동, 남대문 중심으로 해서 500명 정도가 왔으니까. 꽤 많이 왔죠. 그래서 했는데. 몇 사람 잡아가니까 후루룩 흩어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술 먹고 이제 뭐 병 던지고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점상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요.

노점 손수레 보관소는 노점상이 조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이다. 하루 일과가 끝난 노점상은 보관소에 모여서 장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가를 즐기기도 했는데 노점상의 조직 형성에서 보관소는 집결지 역할을 하였으며 의견을 공유하고 노점상의 요구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거점이 된다. 노점 손수레 보관소는 단순한 보관

소 기능을 넘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집단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불만이 쌓인 노점상들이 시청 앞에 집단으로 찾아가 항의한 최초의 행동은 비록 단순한 저항으로 끝났지만 이후 노점상 조직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 2) 노점상운동의 형성기: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의 결성

1980년대 초반에는 남대문 상조회, 민초 신용협동조합, 민초 교회 등 노점상 지역 조직이 존재 하였지만 조직을 확장하지 못하고 내부의 지도력 부재와 정권의 강력한 물리적인 탄압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정부는 노점상 근절을 위해 손수레 보관소 폐쇄 발표를 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시위를 벌이게 되고, 1980년대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최초의 노점상 조직인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가 결성된다.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는 현재의 전국노점상총연합의 모태가 되는 조직으로서 당시 청계천, 동대문 일대의 서적 판매노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주로 노점상 간의 친목과 자신들의 복지 증진에 일차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일정한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점상의 권익과 이해를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

86년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목전에 왔죠. 아시안 게임 때는 경기가 길잖아요. 행사기간이. 뭐 이제 이런 금융회의다 IP총회다 그런 건 뭐 보통 2, 3일 일주일 쉬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15일 한 달. 전후로 해서 두 달, 석 달 이렇게 뭐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막막하니까들 얘기들이 나온 게 또 한 번 몇 년 전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입에서 보관소로 전달이 돼가지고. 보관소 주인들이 많이 역할을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생업인데 손수레 맡아 놓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들끼리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보관소를 폐쇄하겠다는 발표도 해요. 노점상을 아예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맡겨놓는 보관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보관소를 다 철폐를 하라고 계고장이 나오죠. 보관소 주인들도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자기들도 노력도 하고 우리도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얘기가 돌아가지고.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노점상은 3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 손수레 보관소는 1986년 노점상의 집단행동에도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노점상이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손수레 보관소 폐쇄 발표로 보관소 주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보관소 주인들은 노점상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데 있어 노점상 사이에서의 의견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연결망 역할을 한다.

86년도에 한 번 또 시청에서 자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모여가지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83년보다 강도가 좀 셉습니다. 그때는 뭐 앞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누가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중략... 아무튼 그때는 몸싸움도 있었고. 시청에 들어가자. 술 한 잔씩 먹고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가다가 이제 연행이 되고. 최루탄 한 방에 그냥 다 도망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직을 제가 출발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초대 의장님이셨던 000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 종로통 명동 내가 장사하는 그때 당시 명동 요 동대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때 사회단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조직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의 시청 앞에서의 2차 집단행동은 노점상 조직의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83년의 집단행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6년에는 미약하나마 집회의 형식을 갖춘다. 또한 사회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노점상이 전면에서 투쟁을 주도하면서 억압되어 있던 노점상의 감정이 고양되고 노점상 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조직화 그 투쟁을 계기로 해서 조직화의 움직임이 보였고.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오래되신 장사 오래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중략... 그렇게 되면서 조직화가 되서 86년도 말에 그때 이제 뭐 사회 정치적으로는 사회 분위기는 민중항쟁이 들끓었던 때니까. 서울 같은 도심권에서는 전국적으로다가 비슷한 현상이었지만. 매일 데모를 했어요. 군사독재정권. 그때 광주항쟁 비디오가 막 시내에서 틀어지고. 명동성당에서 틀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데모를 매일 본 거 같아요. 쫓아 댕기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쭉 잡혀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노점상 조직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명동성당에서 어느 날 뭐 그 노점상 대동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저도 ‘어디 노점상들이 모여?’ 이래서 이제 한번 갔는데 최루탄을 맞았어요. 그땐 이제 모이면은 거의 최루탄이 날라 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해산이 되고. 안에서 몇 사람 있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안에서 집회만 좀 하고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뭐 들어가서 사람만 모이면은 이제 최루탄 썩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점상 조직으로서는 그걸 뚫고 뭐 어떤 시위를 광범위하게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몇 사람이 미리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알고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노점상이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걸 선언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러면서 노점상 복지회가 복지회란 이름으로 동대문 바로 옆에 이스턴 호텔 옆에 조그만 사무실이 생겨납니다.

19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도 노점상 조직이 형성되는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운동이 이념화·급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독재정권에 맞선 학생,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서울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도 도심에서 매일 열리는 집회를 보면서 이에 영향을 받고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sup>6)</sup> 노점상 조직의 출범은 한편으로는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며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받은 노점상이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한편 전국적인 민주화항쟁의 시대 흐름에 영향<sup>7)</sup>을 받은 것이다.

### 3) 노점상운동의 전성기: 노점상의 조직적 활동

1986년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가 결성된 후 조직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는 1987년 10월, 명동 성당에서 노점상 대동제를 거쳐 도시노점상연합회로 전환한다. 노점상은 조직력과 체계를 기반으로 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1987년을 거치며 안양, 성남, 수원, 인천, 부산, 경주, 원주, 대전, 목포, 제주 등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그동안 단속반과 경찰에게 상납하던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위의 책: 22).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또 다시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발표하고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는 이에 대비하여 1988년 6월 13일<sup>8)</sup> 성균관대학교에

6) 1980년대 사회운동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르크스-레닌의 원전학습 등이 전개되어 사회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80년대의 변혁논쟁과 사회운동은 이후 노점상운동 정립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7)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공안통치의 균열을 가져왔고 노점상이 자신의 생존권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8)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집회는 단속과 억압에 시달려온 노점상이 조직을 결성하여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 중단을 요구한 최초의 대중적 시위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13일에는 '613대회'가 개최되고 노점상과 빈민의 요구안을 내놓으며 전국의 노점상이 결집하여 집회를 한다. 613대회는 노점상 조직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며 노점상에게는 그날이 노점상 생일이고 일종의

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명동이나 종로, 동대문 이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워낙 단속이 심하고 그리고 이 데모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우리도 조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도 짝 잡혀있었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가입이 순식간에 명동, 남대문, 종로, 동대문 여기 지금 서울운동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직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복지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노점상 복지회가 86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도 하고 체계 이 조직 체계가 잡히면서 조직적으로 이제 뭐 항의방문도 하고 현장에서 방법들하고 이제 몸싸움도 일어나고, 구청에 가서 항의방문도 하고 또 경찰서에 항의방문도해 복싸우고 물어뜯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략... 그런 속에서 노점상들이 87년도에 조직이 광범위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국조직으로 이제 갖추어 집니다.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조직화가 급속도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중략...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활동가들하고 같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회 기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걸 맡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87년도에 전체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서 우리 노점상 연합도 집회도 하고 간헐적인 집회도 하고 또 현장에서 몸싸움도 해 나가면서 이제 조직을 확대를 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 같아요. 순식간에 한 1년 사이에. 굉장한 이제 조직력이죠. 그동안 이제 노점상들이 그만큼 이제 단속을 많이 받고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는 1987년,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되는 한편 노점상이 단속을 받으면 조직적으로 구청,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의 기반을 다진다. 1987년부터 1988년

---

잔칫날이다.

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만여 명의 노점상이 조직에 가입을 한 것은 1980년대에 노점 탄압이 많았고 노점 대중이 억눌려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구청에 조직적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노점 단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점상 조직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조직이 결성된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노점상을 대화의 상대나 단속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투쟁전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로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발전할수록 사회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알려내고 빈민 대중의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6·13대회를 87년도에 6·13대회를 6월 13일 날 성균관대에서 이 집회를 잡습니다. 집회를 잡았는데 아마 조직적으로 노점상 집회를 잡은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잡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중략... 막상 이제 집회를 하는 그 당일 날 보니까. 그때는 무슨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화들이 다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뼈빠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이제 통지로 해서 선전물을 만들어가지고 돌린 것 하나 외에는 특별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6·13대회 성균관대학교에서 금잔디 광장에서 열렸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천 명 정도 3천에서 한 4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기설기 집회를 한 거 같아요. 그때 뭐 국회의원도 나와 가지고 뭐 얘기를 했던가 안했던가. 하여튼 이러 저러한 개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연설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 대회’는 단속과 억압에 시달려온 노점상이 도시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을 요구한 최초의 대중적 시위이다. 이 집회에는 3천여 명의 노점상이 노점상의 단합과 투쟁을 결의하고 교문 밖으로 진출 투쟁을 하여 17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6월 16일까지 계속된 투쟁으로 정부는 기존의 강경 단속에서 방침을 완화하고 보관소 폐쇄 계획을 보류하였다. 또한 이날 집회를 계기로 노점상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면서 노점상이 하나의 집단으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날 나오는데 성대에서 못나오게 하죠. 당연히. 집회 자체도 이제 이미 그때는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기였습니다. 모든 집회는 불허고 원천봉쇄고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회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좀 아주 조직된 형태가 아니라 얼금얼금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성대 정문에서 부딪치면서 뭐 돌 던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또 이제 노점상들도 조직적으로 해본 건 처음이니까 굉장한 자신감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신도 났고 그런 속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안 무서워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돌 던지고 싸우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 데모할 때 배웠던 것들 거기서 다 써먹자 해가지고 돌 던지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6월 13일 투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단속은 88올림픽이 가까워지자 또다시 시작되었고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는 8월 고려대학교에 2천여 명이 모여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악법철폐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올림픽이 민중의 생활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없고 외국인과 가진 자들만을 위해 노점상을 단속하고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반민중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토론회 이후 시청으로 행진하여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튿날 부시장의 면담을 통해 올림픽 기

간 중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또한 8월 집회를 계기로 빈민단체와 빈민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를 모색하여 ‘도시빈민투쟁위원회’를 건설하였다(위의 책: 25). 8월 집회는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빈민단체와 빈민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도시빈민투쟁위원회’<sup>9)</sup>를 건설하는 등 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을 도시빈민운동의 중심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8월 1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악법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와 이어진 대규모 집회로 노점상이 단지 하나의 집단으로 시민에게 인식됨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일반 대중에게 노점상의 요구를 알려내는 성과를 거둔다. 또한 시민들의 호응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투쟁한 결과 노점단속 유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성장으로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는 도시노점상협의회를 거쳐 1988년 10월, 전국노점상연합회로 명칭을 개칭한다. 이후 1989년 2월 규약을 개정하고 지부, 전국 체계를 지부-지역-전국 체계로 개편하고, 중앙위원회·중앙위원 등의 의결구조를 확정(위의 책: 23)한다.

#### 4) 노점상운동의 위기: 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따른 조직의 분열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힘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낙인 찍혀 온 노점상 대중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노점상연합회는 다양한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노점상의 권리 쟁취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성과로 인해 전국노점상연합회는 노점상 대중조직으로서 실체가 인정되었고, 노점상 생존권이 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노태우 정권이 집권하면서 강한 탄압을 받게 된다. 또한 조직의 규

9) “1988년 건설된 도시빈민투쟁위원회는 도시노점상연합회의 613대회,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탄압 받는 도시 빈민 생존권 쟁취 대회와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계기로 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회, 빈민 지역의 교회 등이 결합하면서 최초로 빈민 단위의 역량을 결집시켜 연대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가 커지면서 노점상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노점상 투쟁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점상종합대응정책’을 발표한다. 이 정책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의 대응 조직으로 관변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추첨을 통하여 일부노점상에게 가로판매대, 임대아파트 지하상가 분양권, 품물시장 조성, 음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기화된 투쟁으로 지친 대다수의 노점상은 추첨에 의하여 대책을 받고 조직에서 빠져나와 흩어지게 되고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조직력은 위기를 맞는다.

#### (1) 노태우 정권에 맞선 노점상의 투쟁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세력의 분열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이 성장하면서 노태우 정권은 정국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자·농민 등 기층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계속되었고, 야권과 민주화운동세력 등의 적극적인 연대로 노태우 정권을 압박하였다.<sup>10)</sup>

노태우 정권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양의 방북을 계기로 보수 세력을 총결집시키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좌익용공세력 발본색원이라는 기치 아래 안기부·경찰·검찰·보안사 등의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전국노점상연합회의 규모가 커지고 노점상 운동이 발전 할수록 노점상 또한 정권에 걸림돌이 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공안 정국을 이용하여 1989년 6월 11일, 각 일간지를 통해 ‘법질서확립’을 공표하며 전국에 걸쳐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단속의 주요 이유로는 첫째, 6·29선

10) 6월항쟁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이 새로운 기반이 되어 1989년 1월 마침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게 되고 분단 이후 최대의 민주화운동 조직으로서 보수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이 시기에 야권은 민중운동과 민주화세력과 연대하여 광주학살 청문회 개최,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안, 의료보험 통합에 관한 국민의료보험법 등을 제출하며 노태우 정권을 압박하였다.

언 이후 사회 기강이 혼란해진 틈을 타 노점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탈법과 치안불안의 온상이 되고 둘째, 올림픽을 전후해 조성한 서울의 환경을 크게 더럽히고 있다는 점과 셋째, 노점상을 방치할 경우 6공화국의 1차적 과제인 ‘민생치안, 공권력 확립’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sup>11)</sup>는 것이었다.

8월 1일날 동국대에서 전국 집회를 잡는데 ... 7월20일인가. 아무튼 엄청난 경찰병력이 와서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그 전날 중구지역 사무실을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다 털어갑니다. 7월 21일이면 7월 20일날 제가 이제 중구에 있었는데 중구 사무국장이었는데. 중구 사무실이 을지로 입구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서 증거품이다 해서 다 가져가고 동시에 이제 전노련에 중구지역에 있던 집행부들을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갈취범을 그때 회비를 얼마 받았냐하면 200원씩 받았어요. 일인당 200원씩 받는데 그걸 통해서 노점상들이 노점상연합이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갈취를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사무실은 압수수색영장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7월 20일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상황이 됐죠.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노점상조직이 회원의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중앙집행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이용하여<sup>12)</sup> 조직의 중앙 집행부를 먼저 구속하고 회원들의 결집력을 떨

11) “7월 대단속, 단결투쟁으로 물리치자,” 《가로수》, 1989.6.28.

12) 이는 현재에도 노점을 단속하고 노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방법 2007년 2월 서울시가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하기 몇 주 전 노점상 대부분이 10억대 부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로판매대와 노점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가로가판대 점주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마치고 일반 노점상의 재산이 대부분 10억 이상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의 발표가 있는 지 얼마 후 서울시는 소위 ‘재벌’ 노점상을 없애자는 취지로



어뜨리는 한편 일반 대중들에게 노점상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노점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6월부터 정부는 언론을 통해 기업 노점의 부각과 폭력배의 연계, 금품 갈취 등 극소수의 문제를 노점상의 전체 문제로 결부시키며 노점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 상대 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노점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단계별, 지역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 철거를 시작으로 중구 명동 일대의 노점상을 일명 싹쓸이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부 구속을 단행한다. 정부의 ‘7월 대 단속’ 발표 이후 전국노점상연합회는 7월 1일부터 ‘100만 노점 생존권 수호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지부·지역별 결의문회, 전국적인 대중 집회, 공청회, 토론회를 기획하고 회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노점 단속은 중단할 수 없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는 7월 20일경 동국대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명동 성당에 집결하여 36일 동안 장기 농성, 집회, 거리 시위, 선전전 등의 투쟁을 진행했다. 하루에 300~500여 명이 모여 서울 시청, 정부종합청사 진격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삭발 투쟁 등 강도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노점 단속이 강화되고 노점상 조직의 투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1989년 7월 11일, 전문가, 시민, 노점상의 종합 정비 관리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점상 합법화 정책에 관해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적·물리적·제도적 측면에서 노점상에 관하여 논의<sup>13)</sup>하였는데 이는 명동투쟁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노점상 합

---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한다. 2007년 2월에 발표된 노점관리대책에는 노점상의 재산기준, 시간제 장사, 노점 마차 규격제 등을 중심으로 일부 노점상을 관리,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점상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 직업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편 앞으로 서술될 1992년 포장마차 노점의 단속과 같이 식품 노점의 위생 문제를 언론에 부각시켜 단속을 하기도 한다.

- 13) 《해방수레를 끌며》, 30쪽.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점상 단속은 이처럼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의 편의, 정책 입안자의 즉흥적 발상, 국가적·국제적 행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심어줘 단속에 대한 반발과 일반 시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해 왔다. 효과적인 노점상 정책과 더불어 일부의 양성과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다. 일정한 지역의 노점상 금

법화 정책에 반영된다.

그래서 명동투쟁이 약 한 달간 두 달 가까이 한 45일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나 나올 때까지 나올 무렵에 끝났으니까 명동투쟁이. 그러면서 이제 명동투쟁을 전개를 하면서 노점상 문제를 정치화시키는데 정치화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노점상 문제가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 한편에서는 김종필이 같은 놈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하면은 노점상들이 노점상 안에 노점상들이 빨간물이 들어가고 있다. 이럴 정도로 아주 투쟁을 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온건파들은 노점상들은 합법화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노점상까지 날뛰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정치권 내에서도 노점상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가지고 합법화하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들이 논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시청 내에서도 시청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그 노점상 관련해서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강경파들이 생겨나고 이럴 정도로 그 89년도 명동 대투쟁이 굉장히 격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장기적인 명동성당 투쟁을 거치면서 조직의 내적 결속을 다지고 노점상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알려내는데 성공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전국의 노점상 대부분이 없어지고,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구속된다. 정부는 일시적인 노점 단속에 성공하지만 명동성당에 모인 전국의 노점상 투쟁의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노점상을 수용하는 노점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구역 설정, 노점상의 집단 이주 행정 대책으로 각 시·도에 노점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정부의 노점 대책과 조직의 분열

정부는 노점상의 명동성당투쟁이 장기화되자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일부 노점상을 수용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가로 판매대, 임대아파트 지하상가 분양권, 풍물시장 조성, 전업알선 용자, 취로사업, 직업훈련 등을 일부 노점상에게 제공할 것을 제시하자 장기적인 투쟁으로 지친 노점상이 동요하게 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노점 정책을 제시하여 일부 노점상을 포섭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을 받지 않고 저항하는 노점상을 탄압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부들을 구속하면서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분열하고자 하였다.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정부의 노점대책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일부 노점상만 제도권 안으로 포섭될 수 있고 정부의 심사에서 탈락한 노점상은 대책 없이 철거되어야 하고 둘째, 가로판매대의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사를 보장받을 수 없었으며 셋째, 풍물시장의 경우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되지 않는 곳에 조성하는 문제점<sup>14)</sup>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합법화를 한번 주장을 해보자 해서 이 연합회 내부에서 합법화에 대한 어떤 상을 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합법화에 대한 상을 만들기 시작

14) 1989년 10월 2일자 《가로수》의 기사 중 “정부대책, 노점상 분열책동이였다!”를 보면 정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나와 있는데 첫째, 가로판매대의 경우 중복 추첨의 문제, 노점상이 아닌 사람이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시설을 설치하였고 둘째, 생업자금유자의 경우 거액을 보유한 보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셋째, 특별취로 사업은 자금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이외에 풍물시장의 경우, 1989년 노점상유도 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성된 청주 ‘서문교 풍물시장’은 상권이 고사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2001년 10월 철거되었다. 또한 서울의 방배동, 신림동 이외에 원주, 태백, 대전, 광주 등 1980년대 말 노점상 양성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풍물시장 대부분이 장사가 되지 않는 외진 곳에 설치되고, 홍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풍물시장이 흉물이 되어 1990년대 말부터 대대적으로 철거되었다.

한 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합법화를 주장을 하자. 여태까지 우리가 무대책적으로 싸웠다고 하면 이제는 대안을 내놓고 좀 싸우자 그리고 자 유질서도 좀 하자. 그리고 명동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활동가들도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럼에도 활동가들 도 많이 이제 뭐 수배처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다 뿔뿔이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없어지고. 중구지역은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 면은 이제 자율질서 형태를 우리가 짝 자료를 만들고 손수레 전시회도 하 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포함해서 막 국회에도 갖다 주고 국 회의원들 일일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고 시청에도 그걸 갖다 주고 협상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제 안 들어주는 상황이었 죠.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정부 주도의 노점대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 에서 제시하는 노점상 자율질서안<sup>15)</sup>을 국회에 건의하고 손수레 전시회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일부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노점 합법화’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 시하는 노점대책은 일부 생계형 노점상을 일정 기준<sup>16)</sup>에 맞추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노점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신규 발생 노점을 사전에 방 지하는 것에 초점<sup>17)</sup>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점 당사자와 합의가 어렵 다.

15) 노점 마차의 규격화 및 청결 유지, 식품을 파는 노점상의 위생 준수 등.

16)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거리’ 선정 계획, 시간제 규정(오후 4시 이후) 및 규 격화 규정(손수레 2m×1.5m),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로부터 3m 구간, 횡단보도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3m 구간, 버스정류장구역 전후방 3m 구간을 노점금지구역 설정. 개인 인적사항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

17) 서울시의 ‘2009 노점관리정책 및 실행계획-정책방향설정, 실천과제’ 자료 中 ‘지속적인 노점 감축 방안’을 살펴보면, ‘특화거리 조성지역 외 노점 불허’, ‘신 규발생노점 적극정비’, ‘운영자 사망 시 승계 불인정’,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가판대 추첨을 강행을 하고 시청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풍물시장 추첨을 강행을 하고. 그리고 용자를 이제 얼마씩 주겠다. ...중략... 그러면서 하여튼 조직력도 약해지고 다 이제 뭐 풍물시장으로 갔네. 서울 같은 경우에 가판점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이제 풍물시장 들어가고. 아는 사람들이 명동에서도 이 400, 500명 정도의 노점상들이 거의 대책을 받아서 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7명이 남았어요. ...중략...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조직력이 뭐 없어진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못 받고 계속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이제 뒀다방을 하든가 반짝반짝하는 장사를 하던가.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됐어요.

정부의 노점 정책으로 인해 가로 판매대, 임대아파트 지하상가 분양권, 풍물시장 입주, 전업알선 용자 등의 대책을 받은 회원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고 1989년의 공안 정국으로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노점상이 구속되자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조직 규모는 1년 만에 500여 명 정도로 크게 축소된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간선도로변은 노점절대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용역(단속반)을 상주시켜 노점상 진입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결국 1989년 명동 성당의 투쟁은 노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하며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정부의 노점상 합법화 정책에 의한 회원의 이탈로 조직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며 조직력의 위기를 맞는 것으로 정리된다.

##### 5) 노점상운동의 재형성기: 조직의 재결성

정부의 임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노점상 정책의 결과로 1991년부터 노점상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노점 금지구역이 늘어나면서 낮 시간 동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면도로로 이동하여 밤에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

가 점차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포장마차의 위생을 문제 삼아 1992년 대대적인 포장마차 단속을 발표하고, 노점상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한 포장마차 대투쟁을 벌인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는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점상의 요구와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노점상 자립·합법화 등 노점상의 생존권과 권익에 관한 요구를 전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시켜내는 한편 도시 빈민 공동의 생존권적 요구와 공동의 투쟁으로 도시 빈민 전체와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시켜낸다.

그러면서 91년도서부터 찬찬히 노점상이 다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또 질기죠 먹고살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그동안 이제 대책 못 받은 사람 아니면 대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족치 안잖아요. ...중략...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경과를 하니깐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금방 노점상들이 또 늘어나고 또 옛날에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이 조금씩 늘었어요. 한 천 여명까지 늘더라고. 그러니까 92년도에 낮에는 장사를 못하고 주로 이제 탄압이 심하니까 밤을 통해서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낮에는 이제 위낙 심하니까. 그래서 포장마차가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중략... 포장마차가 늘어나가 보니까 92년도에 포장마차 대 단속을 하겠다고 포장마차만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노점상이 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포장마차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콜레라를 발생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이대면서 ‘포장마차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니깐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단속 움직임이 아주 대대적인 단속 움직임이. 포장마차 죽으면 거의 다 죽어 노점상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포장마차나마 못하게 하면 거의 노점상이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생결단하고 우리도 이제 막아야 된다.

1992년의 특징은 포장마차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1990년 들어 보수 야당 민정, 민주, 공화당과 합당하면서 보수연합을 구축하고 곧이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민자당은 각 시, 군, 구별로 일방적으로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 상대 금지구역<sup>18)</sup>을 정하게 되어 낮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면도로로 이동하여 밤에 장사를 하는 노점이 늘어나게 되는데 포장마차가 점차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포장마차의 위생을 문제 삼아 단속을 발표한다. 식품위생법,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고발을 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구속자가 생겼다. 또한 구청 단속반과 용역이 노점상 집 앞의 손수레 및 보관소의 손수레를 파손하거나 압수해갔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992년 5월 19일, ‘서울시 포장마차 조리 노점상 전면철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장기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한편,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중간층을 끌어안고 여론을 보수여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과 민자당 정권은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위해 노점상을 분열하고자 ‘노점환경개선협의회’라는 단체를 9월에 결성한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는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점상의 요구와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 나간다. 구체적으로 노점상 자립·합법화 등 노점상의 생존권과 권익에 관한 요구를 전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시켜내는 한편 도시빈민 공동의 생존권적 요구와 공동의 투쟁으로 도시빈민 전체와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시켜낸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노점탄압에 맞선 노점운동은 노점생존의 근본적 해결과 인간의 기본권 획득은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각종 선거시기에는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노점문제를 비롯한 빈곤의 문제를 정치공간을 통해 알려내는

18) 노점을 하되 아침부터 영업하지 못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영업을 가능하도록 함.

활동을 하였다.

92년 투쟁이 하여튼 굉장한 투쟁을 벌였어요. 저희가 그때 노점상 손에 화염병이 최초로 들어집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연대가 상당히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 투쟁 관련해서 이제 심야에 단속 들어오면은 아주 작전을 잘 짜가지고 화염병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밤에 무장을 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쇠파이프 들고 막 찾길을 가로 막고 나가면 찾길로 뛰어나가고 골목에서 싸우고 이런 아주 뭐 아주 세부화된 싸움을 하면서도 격한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깁니다. 포장마차 단속을 이겨내요. 발표도 없이 그냥 단속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 투쟁의 힘으로 포장마차 싸움을 이겨요. 그때 이제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아주머니들 옷 벗고 여의도 국회도 진출하고 이런 싸움을 하죠. 다양한 싸움을 전개를 합니다. 아무튼 그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싸움을 이겨내서 결국은 승기를 잡죠. 승기를 잡아가지고 조직력을 이제 단속을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전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청을 막 타격을 해서 단속을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싸움을 전개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조직력도 빠르게 회복되는 전노련의 노점상 대중들로부터 전노련 신뢰를 얻게 하는 그래서 빠르게 다시 조직력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92년 투쟁이 또 하나의 우리 노점상 운동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 발전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992년의 명동성당 투쟁은 1989년의 명동성당 투쟁의 경험으로 지역 연합회의 조건에 맞춰 구청 점거 농성과 현장 투쟁에 근거한 거리 선전 전,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사회 여론화 및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간다. 투쟁의 다양한 전술과 노점상 합법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안과 명분을 가지며 전 회원들의 일치단결 속에서 투쟁을 전개해나간



다. 1992년 투쟁은 1990년대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가장 격렬하게 진행이 되며 선거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전면 대응함과 동시에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청원 사업과 손수레 불법 탈취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민자당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재집권 저지를 위한 투쟁과 총선에 민중후보 전술을 이용하거나 대선에 자료집, 선전물 등의 발간과 교육을 실시하고 민자당·국민당 선거운동 안하기, 관권 부정선거 폭로하기, 민자당·국민당 탈당 운동 전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전개 등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선거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위의 책: 47). 강력하고 다양한 노점투쟁을 구사하는 한편, 민중·사회단체들과 연대의 축을 구축하고 노점생존의 본질적 해결점이 정치세력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활동들을 전개한 결과 노점운동의 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켰으며 더불어 전국노점상연합회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992년 투쟁 이후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직을 추스르며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전환하게 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노점상운동과 노점상의 조직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에서의 노점상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노점상연합회의 결성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 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80년대의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의 힘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낙인 찍혀 온 노점상 대중에게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점

상 대중은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다양한 민주주의세력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와 노점상의 권리 쟁취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성과로 인해 전국노점상연합회는 노점상 대중조직의 실체가 인정되었고, 노점상 생존권이 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제기한 노점합법화에 대한 의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런 과정은 ‘불법’이라는 낙인으로 숨죽여왔던 노점상대중도 이 사회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이 사회적으로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노점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권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노점상 정책에 관해 교섭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노점상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노점합법화 의제는 노점상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기보다는 정부가 노점단속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인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악용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노점상운동의 한계는 한편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으로서의 노점상운동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노점상운동은 생존권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공간의 활용과 점유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노점상운동은 노점상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생존권 보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동은 도시공간에 대한 노점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 차원의 권리, 도시빈민들의 문화적·환경적 차원의 권리 등 보편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노점상을 미관의 이유로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물로 없애려고만 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점상은 사회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도 영

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대책은 노점상의 효과적인 축소와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점상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노점상이 제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City Space and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treet Vendors' Movement in 1980s

Kim, Joon-Hee

Street vending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living of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Even though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including young and high-educated peopl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has cracked down street vendors repeatedly becaus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of public space. Through this violent process, street vendors have lost their only or main living means with their potential source of income. Their basic human rights to work and living have been violated to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treet vendors' movement or the street vendors'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980s. Also some activities which the street vendors should do to claim their own rights in public space will be suggested. These alternatives might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street vendors' movement.

Keywords: Urban Low-income People, Street Vendors, Street Vendors'  
Movement, Policies on Street Vendors, the Right to the City

## 참고문헌

- 강정원. 1989. 「노점상 특성과 사회관계에 대한 일 연구: 대구시 서문시장 노점상의 사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건식. 2000. 「노점상 정책의 비판적 검토」. 《도시와 빈곤》, 제47호, 한국도시연구소.
- 김수현. 2000. 「노점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도시와 빈곤》, 제47호, 한국도시연구소.
- 김준연. 2000. 「도시노점상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10.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과 노점상조직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선녀. 1987. 「수원시 노점상에 관한 지역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재준. 1989. 「도시 노점상의 계급성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근식. 1989. 「광주지역 노점상에 관한 실태연구」. 《지역개발연구》, 제25호,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 정원오. 1990. 「노점상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대현. 2000. 「노점상 단속 행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하형주. 2007.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 1948~1997」.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 \_\_\_\_\_. 2001.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 전국노점상총연합. 《가로수》, 1~23, 109~120호.
- \_\_\_\_\_. 《해방수레》, 제2, 3, 4호.